

(2016. 5. 21 시행) 국회직 8급 기출문제 [행정학 해설]

[김 시 동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답 ⑤>

<해설> ⑤ 기관장은 5년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2.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원한다.
-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답 ⑤>

<해설> 통제기관의 경우에는 예산 증가의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고위관료가 자기부서의 예산과 인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만 필연적인 이익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고위관료들은 핵심예산이나 민간부문에 직접 지불되는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는 이익을 얻지만, 관청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은 다른 공공부분으로 넘어가므로 커다란 이익을 얻지 못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달기관이나 봉사기관 등은 예산극대화 동기가 강해지나 통제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관료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한다.

3.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답 ④>

<해설> ④이외의 내용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해설> 비가분적이라는 표현은 비분할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모형을 의미한다.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한국고용정보원
⑤ 국민연금공단

<해설> ⑤는 기금관리형이다. 이외에도 기금관리형에는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다.

-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해설> ① BTO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한다.

구 분	BOT	BTO	BLT	BTL
소유권	정부			
소유권이전시기	운영종료시점	준공시점	운영종료시점	준공시점
운영권	민간	민간	정부	정부
위험부담	민간이 부담*		정부가 부담	
사 례	수익사업에서 많이 사용		비수익사업에서 많이 사용	

최소운영수입보장제(Minimum Revenue Gurarantee ; MRG) : 민간자본이 투입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때,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간사업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나 세금낭비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11.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
-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 ③ 서울대학교 총장
-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답 ②>

<해설> ③ 서울대학교는 현재 법인화되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12.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답 ②>

<해설> ②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방법이다.

13.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답 ①>

<해설> ① 지자체의 장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14.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이다.
-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 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 ⑤ 추가정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답 ③>

<해설> ③은 이월을 설명하는 말이다.

15.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②>

<해설>

① 독립합의형

장 점	단 점
• 인사행정의 중립성 보장 • 신속한 의사결정 •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수용 • 관련 부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 책임 소재의 불명확(책임 전가 가능성) • 의사결정상의 지연 문제 • 행정수반으로부터 인사관리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

② 비독립단독형

장 점	단 점
•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분명 • 신속한 의사결정 • 능률적 행정 • 필요성과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 가능	• 인사행정의 엽관화, 정실화 가능 • 독선적, 자의적 결정의 위험 • 일관성, 계속성의 결여 가능성 • 공무원의 권익침해 가능성

16.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①은 정부가 직접수행하는 업무이다.

<답 ④>

<해설> ④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의 군 중에서 만들어진다.

20.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

-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답 ③>

<해설>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의 특징 및 위기별 위기대응전략

Greiner가 1997년 Havard Business Review에 수록한 논문에 의하면 조직은 성장단계를 거치며 진보와 진보에 따른 위기 그리고 변혁의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① 조직성장의 단계와 ② 성장단계별 위기와 ③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재규, 경영학 총서).

1. 조직성장단계

	제1단계 <창의성(창조)의 단계>	제2단계 <지시의 단계>	제3단계 <권한위임의 단계>	제4단계 <조정 단계>	제5단계 <협력의 단계>
특 징	창업기 성장	전문적 경영자에 의한 집중성장	권한위임과정을 통한 분권적 경영성장	분할통치성장	협력에 의한 성장
경영의 초점	소규모 생산판매	운영효율성	시장확대	조직의 통합	문제해결혁신
조직구조	비공식 구조	권한집중 기능별 조직	권한분산 지리적 분산구조	라인/스태프 제품별 팀구조	매트릭스 팀구조
CEO의 스타일	개인주의 기업가정신	지시형	권한위임	감시 감독	참여형
통제기구	시장에서 결과평가	표준화 원가중심적	보고 이익중심적	계획 투자중심적	참여를 통한 공동목표 설정
관리자 보상	소유권	기본급 성과급	개인별 보너스	이익분배 스톡옵션	팀 보너스

2. 성장단계별 위기 및 대응전략

	1단계 <창의성의 단계>	2단계 <지시의 단계>	3단계 <권한위임의 단계>	4단계 <조정 단계>	5단계 <협력의 단계>
위기	리더십의 위기 (창업자의 위기)	자율성의 위기 (자율성 상실 위험)	통제의 위기 (통제력 상실 위험)	형식주의 위기 (관료주의 위기)	탈진의 위기
위기관인	조직규모가 커짐	권한집중의 가속화	사업부들의 개별활동	상하간의 불신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결국 위기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조직의 등장가능성을 언급
현상	경영의 어려움	종업원의 자율성 상실	각 사업부 통합 관리 시도	규칙과 절차중시	
대응방법	전문경영인 도입	권한 분산형 구조 마련	조정	협력관계 강조	

21.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 례> —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답 ②>

<해설> 지문은 파생적 외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2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답 ④>

<해설> ④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3.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입대체경비
-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답 ①>

<해설>

긴급배정 사유

-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5. 범죄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6. 여비
-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4.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답 ②>

<해설>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5년이내의 기간제한이 있다. 물론 다시 연장가능하다.

25. 다음 중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답 ③>

<해설> ③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